

아니 다.

학력제한없이 19세부터 2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상자위대의 일반직 복무 연한은 2년, 특수직 종과 해·공자위대는 3년간이다. 복무기간 만료 후 계속 복무를 원하는 때에는 매 2년마다 그 연장이 가능하다.

방위청장관을 정점으로 육상·해상·항공막료장을, 그 아래로 지방총감을 두고 있으며, 도 와 현 단위로 지방연락부장을 두고 있다. 자위대원 모집은 방위청장관의 승인을 거쳐 육상자위대장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연락 부장의 관장하에 도·현 및 시·정·촌장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 독 일

독일의 복무형태는 △기본 병역 △군사훈련 △비상시 복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 병역이란 현역 복무를 가리키며 통상 19세가 되는 해에 입영하여 10개월간 보급하는 데, 본인의 선택에 의한 분할 복무도 가능하다. 기본 병역을 복무하는 동안 병역 의무자는 정신적·신체적·병역 적응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 주거이동 신고 등 지켜야 할 각종 의무사항이 모두 9가지에 이른다. 두번째의 군사훈련은 한 차례당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전체 군사훈련 시간은 신분 과 기본 병역 복무기간에 따라 차별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의 비상시 복무란 국가 비상시 기본 병역 복무자에게 3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대한 사람에게도 소집명령이 내려진다. 역종은 △기본병역 △보충역 △예비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충역은 복무를 마치지 않은 자로서,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기본 병역 을 마치는 대로 45세까지 경계예비역과 동원예비군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대체 병역제도로 △저개발국 근무 △민간 재해보호 근무를 들 수 있는데, 저개발국 원조 법에 의하여 징집에서 제외되어 2년간 근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기본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 주한다. 한편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행정 및 경제 분야의 전문직을 종사하는 자는 필수요원이라고 하여 역시 현역 복무를 유보시키고 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와 그 체제가 매우 유사하다. 병역의무 기간은 18세부터 45세까지이며, 장교와 하사관 및 특정임무에 종사하는 직업군 인 등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이르러서야 의무 연한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각군 공히 15개월간이며, 지원병은 2년 내지 4년간이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18세 이상자에게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병역복무 가능 △감정 적 복무 불가능 △병역복무 불가능 등으로 분류하고, 특히 복무 가능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다시 △완전근무가능 △특수기능을 제외한 근무만 가능 △기초 군사훈련 및 특수기능을 제외한 근무 가능 등으로 분류하여 입영조치하되, 이 기초자료를 병역의무가 끝날 때까지 군 인사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크게 △병역복무 불능 및 제외자 △병역복무 면제 및 유보로 구분하여 엄격하게 적요하고 있으며, 면제에는 △법령상 면제 △청원에 의한 면제로 나누고 있다.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게는 △병역복무중의 가족 생계보장 △복무를 마친 다음의 생활안정 대책 강구 △징병검사 및 적성검사 수검을 위한 출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등 세 가지에 대해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가족 생계대책은 입영 전 소

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다음 처음 4년간은 긴급예비군으로, 그리고 나머지 2년간은 대기예비군으로 총 6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긴급예비군에 소속된 자는 거주지 변경등이 통제된다. 특히 3개월간 기초 훈련을 받은 특기요원은 대기예비군으로서 직장인자 거주 이전이 통제된 상황에서 8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정원제인 긴급예비군에 편성된 자도 정규군인과 마찬가지로 급료를 받으며, 퇴역예비군도 연금 미수령자는 간부요원으로 편성되어 급료를 받는다. 예비군 훈련은 연간 1백92시간의 집체교육과 14일간의 동원훈련으로 시간이 짜여져 있으며, 복무형태 및 신분에 따라 훈련의무 연한과 훈련 시간을 차별화하여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 프랑스

혁명기인 1793년 8월 국민회의가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징병제를 채택한 이래,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한 이후 구주대륙 석권을 위한 병력충원 방안으로 징병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원병제를 혼용하고 있다. 18세부터 50세까지가 의무 연한이다. 병역의무는 현역·실역복무 및 예비군 업무를 총칭한다. 징집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해·공군 모두 10개월간이며, 지원병에 한하여 입영시의 약정에 따라 2년 내지 7년간 선택적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용병제 성격의 외인부대(약8천명)를 감안하면 징병제·직업군인제·지원제등 4종류의 병역 유형을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역종은 △군사역 △방위역 △기술지원역 △대의협력역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군사역은 군사력 유지를 위한 현역(대기역 포함) 및 예비역을 말하며, 징집으로 10개월간 복무한 다음 4년간의 대기역 복무를 거쳐 35세까지는 예비역으로 복무하고, 50세까지는 방위예비역으로 종사한다. 방위역은 비군사적인 방위 소요자원으로서, 1년간의 실역복무를 마친 다음 50세까지 방위예비역으로 편입시켰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기술지원역과 대외협력역 편입자는 특정 자격 소지자로서, 주무부 장관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지방 관서나 해외에 배치하여 16개월간 복무토록 하고 있다.

육군에 예속된 중앙징집청장 관장하에 산하 7개 지역 징집관리청장이 군관구사령관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 내의 징집사무소와 선병사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예비군 업무는 각군 참모총장이 관장하고, 병적관리 및 소집 업무는 관구사령부의 동원센타가 담당하고 있다. 자원 선발은 징집사무소의 적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다시 분류선발소의 심사를 거쳐 역종과 배속부대를 결정한다.

징병검사 결과 현역 복무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사유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적 의미의 사유 및 선병정책상의 사유에 해당되면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 이스라엘

기원전 1세기, 로마에 의해 멸망한 이래 2천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며 유랑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온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3년 후인 1948년 영육의 위임통치 굴레로부터 벗어나면서 그들의 옛 고향인 팔레스티나의 복구와 함께 국가를 재건하는 데 성공하



였다.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아랍제국과의 수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것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에 바탕한 민족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의 소산이었다. 국가 재건 후부터 시련은 곧 불어닥쳐, 아랍제국 정규군이 몰밀 듯이 팔레스타인으로 침 공함으로써 발발한 제1차 중동전쟁에서 초기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이듬해 전쟁을 종식시켜 국토수호의 염원을 달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전란은 그치지 않아, 1956년 10월의 제2차 중동 전쟁(수에즈 전쟁(10일전쟁)등 네 차례에 걸친 교전에서 한번도 패한 적이 없어 세계 최강의 군대로 인시강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토와 주권의 수호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전적으로 국민적 책무임을 되새기게 하는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의 국방체제는 한마디로 표현하여 '국민 총동원 체제'라고 말 할 수 있다. 국가 총예산의 3분의 1을 군비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국민이 모두 군인이다'라는 개념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14세부터 17세에 이르는 모든 소년과 소녀는 준군사적 성격을 띤 가드나에 소속하여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곧 시민군제도이며 강제징집제 도의 채택인 것이다. 이스라엘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남자는 18세부터 20세까지, 여자는 18세부터 20세까지 한 국의 현역병과 동등한 상비군으로서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복무기간은 남자 3년, 여자 2년으로 되어 있다. 상비군 복무기간은 육·해·공군 모두 39개월로 못박고 있다. 각 도시마다 상설된 병무사무소는 징집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매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비롯한 각종 테스트를 거치는 등의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대상자들은 군별이나 병과를 1지방부터 3지방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당 국은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장 근접한 병역처분을 내림으로써 군복무를 '국민된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군 복무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드높이고 있다. 전역한 다음 남자는 55세까지, 여자는 50세까지 예비역에 편입되어 유사시의 동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경우에는 소집이나 동원에서 제외되지만, 유사시에는 그 이상의 연령자도 자발적으로 소집에 응하여 순찰이나 치안 보조 업무에 배치 된다. 예비군에 편입된 남자는 매년 60일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시 병과는 상비군 시절 의 계급과 연령을 참자강여 보임된다.

이스라엘 병력은 약 20만 명의 상비군과 60만 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나 라와는 달리 주력군은 상비군이 아닌 예비군이다. 상비군은 평상시 예비군의 편성 및 훈련과 장비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시 예비군이 동원될 때까지 현상유지와 지연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주임무로 삼고 있다. 동원령이 떨어지면 24시간 내에 예비군 전원이 소집되고, 48시간 후에는 전방위(全方位) 전선에 배치된다. 소집 통고는 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전파 매체나 신문 보도를 통한 공개 동원과 군사작전 장 보안이 요청될 때에는 미리 조직된 비선(秘線)에 따라 전달하는 극비동원 등 두 가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 일 본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이 수행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 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 전권도 시인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에 나오는 말이다. 이를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일본은 상비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가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육상자위대를 비롯 한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자위대 설치법'을 두고 있어서 오늘 날처럼 '자위대'라는 상비전력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두었다. 자위대원은 일반 공무원에 중하는 규정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병제에 다름



아니다.

학력제한없이 19세부터 2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상자위대의 일반적 복무 연한은 2년, 특수직종과 해·공자위대는 3년간이다. 복무기간 만료 후 계속 복무를 원하는 때에는 매 2년마다 그 연장이 가능하다.

방위청장관을 정점으로 육상·해상·항공막료장을, 그 아래로 지방총감을 두고 있으며, 도와 현 단위로 지방연락부장을 두고 있다. 자위대원 모집은 방위청장관의 승인을 거쳐 육상자위대장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연락 부장의 관장하에 도·현 및 시·정·촌장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 독 일

독일의 복무형태는 △기본 병역 △군사훈련 △비상시 복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 병역이란 현역 복무를 가리키며 통상 19세가 되는 해에 입영하여 10개월간 보급하는 데, 본인의 선택에 의한 분할 복무도 가능하다. 기본 병역을 복무하는 동안 병역 의무자는 정신적·신체적·병역 적응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 주거이동 신고 등 지켜야 할 각종 의무사항이 모두 9가지에 이른다. 두번째의 군사훈련은 한 차례당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전체 군사훈련 시간은 신분과 기본 병역 복무기간에 따라 차별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의 비상시 복무란 국가 비상시 기본 병역 복무자에게 3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대한 사람에게도 소집명령이 내려진다. 역종은 △기본병역 △보충역 △예비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충역은 복무를 마치지 않은 자로서,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기본 병역을 마치는 대로 45세까지 경계예비역과 동원예비군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대체 병역제도로 △저개발국 근무 △민간 재해보호 근무를 들 수 있는데, 저개발국 원조법에 의하여 징집에서 제외되어 2년간 근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기본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공공목적 수행하는 행정 및 경제 분야의 전문직을 종사하는 자는 필수요원이라고 하여 역시 현역 복무를 유보시키고 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우리나라와 그 체제가 매우 유사하다. 병역의무 기간은 18세부터 45세까지이며, 장교와 하사관 및 특정 임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 등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이르러서야 의무 연한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각군 공히 15개월간이며, 지원병은 2년 내지 4년간이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18세 이상자에게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병역복무 가능 △잠정적 복무 불가능 △병역복무 불가능 등으로 분류하고, 특히 복무 가능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다시 △완전근무가능 △특수기능을 제외한 근무만 가능 △기초 군사훈련 및 특수기능을 제외한 근무 가능 등으로 분류하여 입영조치하되, 이 기초자료를 병역의무가 끝날 때까지 군 인사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크게 △병역복무 불능 및 제외자 △병역복무 면제 및 유보로 구분하여 엄격하게 적요하고 있으며, 면제에는 △법령상 면제 △청원에 의한 면제로 나누고 있다.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게는 △병역복무중의 가족 생계보장 △복무를 마친 다음의 생활안정 대책 강구 △징병검사 및 적성검사 수검을 위한 출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등 세 가지에 대해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가족 생계대책은 입영 전 소

등의 범위 내에서 생계 비를 지급하나, 일정 수준의 상한액을 정해 두고 있다. 제대 후의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교육훈련 및 통신수업의 보장과 함께 제대 즉시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적극적이다. 한편 기본 병역복무로 생계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예 병역복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유보해 주기도 한다.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의무자 전원에게는 우리나라의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민사복무'를 시 키고 있으며, 그 기간은 13개월간이다. 복무 유형은 농장·양로원·갱생원·재활원·장애자를 고용한 생산공장 등에 배치하여 복 무토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데장애자 보호, 노인 및 장애자 봉사, 병원 앰블런스 운영, 병 원간호보조, 구조봉사 보조, 공공건물 관리 및 수리, 주방 및 세탁 보조, 환경보호 등 다방면 에 투입된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민사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 있다.

## TOP 목차

### 스위스

국민개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많다. 영세중립국으로서 헌법상 상비군 보유가 금지되어 있는 반면, 국가안보책으로 민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비군 확보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병력의 육성과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단 유사시 48시간 내에 100%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민방위대를 포함하여 총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30만여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면제자에 대하여는 보상 세금제도(병역세)를 두고 있을 만큼, 국민개병원칙을 지키고 있다.

스위스의 모든 남자는 20세가 되는 해에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4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 을 받 으면 곧 민병으로 편입되어 20세부터 50세까지 복무하여야 한다. 복무형태는 △정예병 △후비병 △국민병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예병은 20세부터 30세까지 1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8회에 걸쳐 24 주간의 소집훈련을 받 아야 한다. 후비병은 33세부터 42세까지 1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3회에 걸쳐 6주간의 소집훈련을 받 아야 한다. 국민병은 43세부터 50세까지 복무하여야 하며, 2회에 걸쳐 2 주간의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 다. 병무행정 체계 국방부 산하 총사령부가 관장하며, 지방 병무행정 은 7개 지방병무관과 시·군에 해당하는 44개의 지구병무관을 두고 자원관리와 징병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특히 신병 훈련을 마친 후 개인 군장을 지급하여 가정에서 보관토록 하고 있으 며, 동원시에는 지급된 장비를 휴대하고 응소한다.

---

## 군축문제에 대한 주제토론

### 유럽제국의 병역제도 전환추세

K. H. M. / 인력관리연구원

현재의 IMF체제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은 직업의식 및 제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GNP의 상승과 더불어 국민경제생활 수준의 향상은 군복무를 3D직업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가져왔으며, 군에대한 이러한 인상은 징병대상자들의 군입대 및 복무에 대한 회피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권리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주창되는 자율권 및 기본권,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강조는 특정 시점에 징병제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



다. 특히 유럽국가의 징병제 포기 및 병역제도 전환에 관련된 지표를 통해 보건데 한국도 비슷한 변화추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원입대율의 상승, 징집구성비의 하락, 여성인력의 활용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책으로 현재의 징병제에 추가하여 모병제 및 자원입대 범위의 확대방안을 통하여 좀 더 유연한 제도의 운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통일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병역제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대비 가능한 방안인 것이다.

### 유럽징병제 국가의 변화추세

유럽 제국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군 구조의 조정과 함께 병력충원의 기본수단인 병역제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유럽 제국은 징병제에 의한 대병(大兵)주의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이후 군사적 위협이사라짐에 따라 대병체제(大兵體制)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됐고, 이에 따라 대병 구축에 필수적인 징병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유럽 제국은 안보환경 변화로 군구조의 조정 및 병역제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제국은 소련의 붕괴 및 안보환경 변화로 병력감축실시, 군대 참여율의 하락 발생으로 징집제도의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역시 국방환경이 뚜렷이 변화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군구조의 조정과 함께 병역제도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때마침 유럽에서 일고 있는 군구조의 조정 및 그에 따른 병역제도의 전환과 관련된 최근 연구중에서 가장 독보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Kelleher의 연구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병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환될 수 밖에 없는 병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일조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여섯가지 지표는 병역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대병주의 퇴조 및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

Kelleher는 군대 참여율 및 징집율 등 여섯가지 군구조 변화지표 측면에서 대병체제의 퇴조 및 병역제도의 전환추세를 논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Kelleher의 여섯 가지 군구조 변화지표, 즉 군대 참여(MPR: Military Participation Rate) 및 징집구성비(CR: Conscript Ratio), 병역형평성(Burden Equality), 과학기술수준(Level of Technology), 여군 비율(WR : Women Participation Ratio), GNP와 징집구성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중 핵심적인 사항만을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90년대초 또는 중반까지 징병제를 유지해 온 서유럽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 군대 참여율 및 징집구성비

전체 인구 중 현역과 예비군이 차지하는 비율인 군대참여율(MPR)은 군구조 해석에 있어 단순히 병력의 절대수로만 나타내는 방법보다 더 정확한 현상을 보여준다. 1970-1990년 15개 징병국의 평균 군대참여율은 6% 정도로 나타났으나, '90년 이후 구 소련의 붕괴로 각국이 병력을 급속히 축소, 이 비율은 다시 크게 떨어지고, '95년에는 4%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중립국들(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은 이러한 군대참여율의 점감추세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군대참여율을 유지해 왔다. 징집구성비(CR)는 전체 병력중 징집에 의한 병력의 구성비를 의미한다. 군대참여율(MPR)이 사회인력의 군 참여율을 반영하는데 비해 징집구성비는 병력 구조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군대형태를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징집구성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더 대병체제라 할 수 있다. 1970-1989년 평균 징집구성비는 60% 이상이었으나, '89년 이후 하락을 시작, '95년 50% 수준으로 내려갔다.



동 기간 67% 수준의 징집구성비를 유지한 국가는 7개국(스위스, 터키,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이며, 이중 '95년 현재 4개국(스위스, 터키, 핀란드, 그리스)만이 67%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50-66%를 유지하던 4개국(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프랑스)중 이태리만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그 비율이 점감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89년 이후 징집병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그 대신 지원병의 비중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을 징집구성비의 변화추세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징집형태, 즉 가정집군, 연성징집군, 경성징집군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징집형태군은 50% 미만의 징집구성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군으로서 이는 국가징집(PseudoConscriptForces)에 해당된다. 이 국가군은 점차 지원병의 비중이 증가하여 군의 다수를 지원병들이 차지하고 있어 징집병군이라기보다 사실상 지원제군에 가깝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에 5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네델란드)이 포함되며, 특히 벨기에와 덴마크는 냉전시대에도 아주 낮은 징집구성비를 유지했으며, 나머지 역시 냉전체제 붕괴 이후에 징집구성비를 급격히 축소했다. 이들은 결국 냉전종식과 함께 군의 다운사이징을 통해 징집구성비를 낮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번째 징집형태군은 징집구성비가 냉전시대에 평균 50-66% 대를 유지하다 냉전종식후 그 비율이 점감한 국가군으로서 이는 연성징집군(Soft Core ConscriptForces)에 해당된다. 6개국(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이 이 부류에속하며, 일부는 단기간에 징집구성비가 급락했다. 스웨덴과 포르투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스트리아와포르투갈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징집구성비가 크게 떨어졌으며, 바르샤바 조약 폐기 이전인 '80년대 말부터 이미 하락이 시작됐다.

세번째 징집형태군은 징집구성비를 냉전기간 동안 평균 7% 이상, 그리고 '95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국가군으로서 이는 경성징집군(Hard Core ConscriptForces)에 해당된다.

유럽제국의 경우 징집구성비의 하락으로 지원병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50%미만의 징집구성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집군국은 냉전이후 급격한 징집구성비의 하락으로 지원제군에 가깝다. 50-60%대의 연성징집군의 경우도 냉전후 징집구성비가 하락하고 있다

동서 양극화의 소멸에 따라 병력을 축소하고, 좀 더 광범위한 지원에 의한 군의 모집 및 유지라는 방향으로 비교적 지속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병역대상자의 입대율 하락으로 자원의 활용도가 하향추세에 있어 심각한 병역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징집병이 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스위스, 터키, 핀란드, 그리스 등이 이에 속하며, 핀란드 외에는 모두 동서 양극화의 소멸에 따라 병력을 축소했지만 첫 번째 및 두 번째 형태 군에 비해 감축 정도가 낮다. 이들 징병제 국가의 징집 형태는 경성징집군에서 좀 더 광범위한 지원에 의한 군의 모집 및 유지라는 방향으로 비교적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냉전종식 이후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 명확해졌으며, 가정집군의 대부분은 벨기에나 네덜란드처럼 이미 징병제를 폐지했거나 프랑스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이를 포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정집군에서 지원제군으로의 전환경향은 이제 뚜렷하며, 이는 연성징집군이 가정집군 또는 곧바로 지원제군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전자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고, 후자에는 스페인과 이미 징집제의 폐지를 선언한 포르투갈이 포함된다.



## 병역의 형평성

이는 18-32세 병역대상자의 입대율인 MPRMAC(Military Participation Ratio of the Military Age Cohorts)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의 급격한 하락은 병역대상 자원의 활용도가 하향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징집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입대율의 하락은 심각한 병역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1987-1991년 15개국의 병역대상자의 평균 입대율은 50%를 약간 상회하였고, 이는 18-32세 남자인구 둘중 한명만이 징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93년 이후 급락, '95년의 경우 3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

5개 가장집국(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입대율은 지속성과 정도면에서 지원제 국가와 차이가 없으며, '95년 현재 25% 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제 이들은 순수한 의미의 징병제 국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원제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징집병 활용률은 아주 낮으며, 징집을 단지 인력확보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인력 보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 및 네덜란드가 징병제 폐지를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병역대상자 입대율의 가장 본격적인 변화는 연성징집군(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에서 나타나고 있다.

'90년 18-32세 남자인구의 2/3가 징집대상이었던 데 비해 '94년에는 겨우 1/3만 이에 해당하였음을 볼 때 그렇다. 이 국가들의 병역대상자 입대율은 가장집군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해당 국가들이 냉전종식후 수년간 전면징집보다 선별징집을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이들은 대병체제를 포기했고, 조만간 징병제 자체도 병역형평성 측면에서 정치적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경성징집군(핀란드, 그리스, 터키, 스위스)에서도 병역대상자 입대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연성징집군에 비해 하락율이 아주 미미해 아직도 병역대상자중 약 2/3가 징집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징병제는 이들 국가의 병력 충원 수단으로서 여전히 확고한 위치를 지킬 것으로 판단된다.

## 여군 비율

여군 비율(WR)은 네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군은 첫째 모든 국가에서 지원제로 운영되며, 둘째 단기 징집병이수행하기 어려운 이른바 기술적으로 복잡한 업무분야에 배정된다. 따라서 여군 비율은 군의 과학기술 기준지표로 활용되며, 역사적으로도 여군은 해군 공군과 같이 특성화된 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결국 여군비중과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음(negative)의 상관관계를 이룬다. 유럽제국의 경우 병역대상자의 징집율 하락으로 징병제 자체도 병역형평성 측면에서 정치적 이슈화 될 가능성 높다 무기체계와 장비의 고도화, 복잡화로 해공군 징집구성비의 하락으로 유럽제국의 경우 해공군의 징집구성비 하락 추세 가속으로 지원제국으로의 전환가능 국가가 점증하고 있다 최근 유럽제국의 여군비중의 뚜렷한 증가 추세로 해공군의 경우 징집병의 대체인력으로 여군을 활용하고있다 여군비중과 대병체제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여군비중의 점증은 병역제도 전환의 한 지표가 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여군은 전투군무지원 분야에서 근무하며,

넷째 남성들의 전통적인 업무분야에 여군의 진출이 확대된다는 것은 곧 그 사회의 여성 활동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화의 정도와 GNP는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여군 비중은 특히 부국에서 높다. 따라서 여군 비율은 군의 인력 및 기술구조의 특성지표로 인식되며, 이것이 높을수록 대병성향은 낮고 군의 특성화와 전문화는 그만큼 높다. 분석결과 서유럽 제국의 여군 비율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국가에서 역사적 이유로 여군에게 무기 관련 업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독일처럼 아예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1986-1994년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등은 여군 비율이 2.5% 이상으로 조사 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공군의 여군 비율은 타군에 비해 높으며, 특히 '8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 '93년 최고점에 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군의 여군 비율은 겨우 '84년부터 육군을 추월했으며, '88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육군의여군 비율은 '90년부터 점증하기 시작했다.

여군 비율과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부분의 가설은 입증됐다.

첫째 GNP의 증가와 여군비율은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이루며, 이는 곧 현대화의 정도에 따라 이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여군 비율과 징집구성비, 해·공군의 징집구성비, 육군 비중, 복무기간에는 음(negative)의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해·공군의 경우 여군은 징집병의 대체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징집기간 단축은 여군 지원자의 증가로 가능해져 여군 비중과 대병체제는 뚜렷한 부의 상관관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리스는 경성징집군임에도 불구하고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예외에 속한다. 일반적인 경향과 여군 비율에 있어 징집구성비에 의한 유형 분류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즉 지원제 국가의 여군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가정집국이며, 연성 및 경성징집군국은 여군 비중이 낮았다. '90년대 들어 대부분의 연구 대상국들이해 공군의 징집구성비와 마찬가지로 여군 비율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어 이 요소가 병역제도의 전환의 한 지표로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GNP와 징집구성비

1970-1994년 대상국의 징집비율은 군대형태의 핵심변수로 삼아 1인당 GNP와 연계시킨 결과 상호 미약한 관계가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대병체제가 축소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결국 경제성장보다 냉전종식과 같은 지리전략적 상황변화가 대병체제의 전환과 더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가 저수준 경제국보다 더 빨리 징병제를 폐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회일반적 성향을배제할 수는 없다. Kelleher의 군구조 변화지표에 대한 분석외에 연구대상 국가의 군사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그 결과에 의하면, 징병제 폐지가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가나타났고, 가정집군국은 덴마크, 독일로 나타났으며,연성징집군국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구조지표상 경성징집국은 2000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할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및 소결론

서유럽 징병제 국가의 군구조 변화지표 분석과 전문가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징병제 국가의 징집 형태별 특성을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50% 미만의 징집구성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집군은 병역대상자 입대율이 25% 이하이며,



과학기술 수준의 지표인 해·공군 징집구성비는 30% 수준이고, 여성비율은 다른 징집군보다 높다. 또한 이 징집군에 속하는 국가들은 징병제 폐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이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이 있으며, 이 중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이미 징병제를 폐지하였고, 프랑스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냉전시대에는 평균 징집구성비가 50-66% 선을 유지하다가 냉전종식후 그 비율이 점감한 연성징집군은 병역대상자 입대율 측면에서는 가정집군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해 공군 징집병 비율은 40-50% 수준으로 가정집군보다 높다. 여성비율은 가정집군보다는 낮고 경성징집군보다. 이 부류에 속하는 국가들은 징병제 폐지 가능성 측면에서 가정집군보다 그 정도가 낮다. 이에 포함되는 국가들로 오스트리아, 이태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높은 징집구성비를 유지하고 있는 경성징집군은 병역대상자 입대율, 해 공군징집구성비 등이 타 징집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대병체제의 축소 관계가 설득력이 없다 하더라도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빨리 징병제를 폐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서유럽제국들은 가까운 장래에 군구조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그에 따른 징집구성비 및 병역대상 입대율의 하락, 여성비율의 증가 등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들 국가들은 2000년대에 대병체제 및 징병제를 상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징병제에 추가하여 모병제 및 자원입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하여 좀 더 유연한 제도의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여성비율은 다른 징집군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다. 이 징집군은 징병제 폐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터키, 그리스, 스위스, 핀란드 등이 포함된다.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유럽 제국들은 경성징집군을 제외하고는 가까운 장래에 군구조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그에 따른 징집구성비 및 병역대상 입대율의 하락, 여성비율의 증가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국가들은 2000년대에 사실상 대병체제 및 징병제를 상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가정집군인 독일 및 덴마크의 경우 현재는 징병제를 폐지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5-10년내에 징병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성징집군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도 10-15년 이내에 징병제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성징집군 중 스페인 및 포르투갈 등은 이미 징병제 폐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빨리 징병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럽제국의 변화가 미래의 한국 병역제도에 갖는 함의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사회의 병역환경도 징집구성비의 하락과 지원율의 상승 등 병역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인구중 군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인 군대 참여율(MPR)이 예비군의 경우 100명당 7명 정도로 외국군에 비해 상당히 높다 할 지라도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징집에 의한 병력구성비인 징집구성비(CR) 측면에서 볼 때 지원에 의한 입대자의 상승으로 징집구성비의 하락이 미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입대자의 자원에 의한 입대 및 지원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의 모색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현의 단계로 진행된다면 징집병에 의한 구성율은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 이는 인력규모의 감축이 진행될 통일환경을 고려할 경우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컨대 군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공군 징집구성비의 경우도 대개 지원에 의한 병 획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GNP의 상승과 더불어 국민경제수준의 성장은 군을 3D직업으로 인식하게 되는 인식을 가져왔으며, 군에 대한 이러한 인상은 군입대 및 복무에 대한 회피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권리의



식의 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어느 시점에서 징병제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의 징병제에 추가하여 모병제 및 자원입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하여 좀 더 유연한 제도의 운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통일한국사회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병역제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일정정도 대비 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

## 징병제관련 기사 모음

한겨레21 301호 2000.3.30

징병제를 흔들어라

공론의 장에 떠오른 '모병제 전환' ... 여야 정당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군필자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 이후, 대한민국 남성들은 여성들을 겨냥해 놀랄 만한 단결력을 발휘했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는 "60만명의 군인 사기를 떨어뜨렸다." "여자도 군대 보내라." 등의 공격적 주장들이 쏟아졌다. 어쩌다 여성 네티즌이 논쟁에 끼어들면 남성 수십명씩 달려들어 목사발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남녀간 성 대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은 모두 꼭 군대에 가야 하는가? 현재의 병력규모와 징병제도는 안보상황에 견주어 적절한 것인가? 군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남성들이 벌였던 사이버 대공세는 징병제가 안고 있는 이런 본질적 측면들을 상당부분 간과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등을 마구 두들겨패 자신들의 기득 이익을 지켜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49년 병역법 제정으로 육군 2년, 해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면서 도입된 뒤로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은 채 골간이 유지돼왔다. 한국전쟁, 68년 1·21 사태 등 안보상황에 따라 군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밖에 제도 자체를 놓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정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97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고위층 자제의 병무비리 수사가 총선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군가산점 위헌 논란에는 수많은 네티즌이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징병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이 심상찮다는 점이 확인됐다. 유력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형평성, 현역과 단기사병(방위) 복무자 또는 미필자간의 사회적 차별, 남녀 평등 논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 등 징병제가 지닌 근본적 문제점들이 하나씩 공론의 무대로 올랐다.

국민들의 불만이 심상찮다

안보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남북 관계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북핵 위기에 비견되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으나,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해결점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현 정부는 잠수함 사건, 서해 분쟁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 햇볕정책 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는 병역문제를 둘러싼 표피적 논쟁을 징병제나 모병제나, 또는 한반도의 군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등의 좀더 근본적 주제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보적인 평화운동단체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가 인터넷상에 '군축 토론마당' ([www.peacekorea.org](http://www.peacekorea.org))을 마련해 넉달째 운영중이며, 3월18일에는 한국여성학회가 '군가산



점 제도의 쟁점과 실태' 라는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군가산점 논란을 문제의 본질로 심화시키자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었다.

젊은층들의 움직임은 이들이 징집 당사자라는 점에서 좀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을 만들어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아주대, 수원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와 여성운동모임, 장애인 인권단체 등 40개 대학의 크고작은 조직들은 올해초 한 데 모여 '실질적 군문제 해결과 군가산점 존치안 철폐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 위원회' (이하 '비대위')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이름에도 명시했듯이, '평등권' 에 위배되는 군가산점 제도 폐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군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당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선 공약을 통해 의무복무기간 단축에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자는 주장, 징병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앞다퉈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당으로서 민심의 심상찮은 기류에 나름대로 응답하고 나선 것이다.

### 민주당 공약, 징병제+모병제

민주당은 3월14일 총선 공약을 통해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유급병 지원제(직업군인) 도입과 연계해 사병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김원길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당국자 회담 제의를 비롯한 최근의 남북관계 흐름으로 볼 때 '평화체제 진전' 의 계기는 올해 안에라도 가시화될 수 있다" 며 "그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과감히 단축하면서 직업 기술병을 확대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집권여당으로서 모병제 도입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다. 장교와 하사관까지만 직업군인이 있는 현재의 제도를 바꿔, 사병까지 모병제 직업군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약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방인력 충원제도는 모병제+징병제 혼합체제로 근본적인 성격 전환을 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기술병과를 중심으로 직업병을 모집하는 방안을 만들어냈다. 해당 병과 의무사병으로 복무한 사람 가운데 장기근무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당연히 '직업' 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된다. 계급 제도는 기존의 의무병은 상병까지 달다가 제대하고, 병장을 직업군인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민주노동당도 징병제+모병제 혼합체제를 주장하지만, 강도는 더 높다. 민주노동당은 군사 분야 공약에서 △18개월로의 복무기간 단축과 △지원병제 확대를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와 같은 비대한 군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통상 적정 병력규모를 인구의 1% 이내로 보고 40만명 이하 규모로 감축해야 한다" 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제안 배경으로 군병력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들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99년의 한국 국방비는 13조7490억원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운영유지비가 69.9%인 9조6087억원, 이 가운데 인건비가 5조604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24만명의 병력을 지원제로 운영하는 일본 자위대는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64%로서 한국의 그것보다 적은 상태다(표2). 이것은 67만명에 이르는 비대한 군조직 운영에서 파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문서는 "징집 사병이 증가할수록 이를 통솔할 장교·하사관 조직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군대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보다 좀더 진보적 노선을 자처하는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징병제를 구시대적 냉전체제의 대표적 잔재" 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청년진보당은 징병제의 전면 폐지와 모병제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진보당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해도 방위비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징병제가 인건비가 싸게 드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60만명의 청년이 군에 가지 않고 2년여 동안



경제활동을 벌일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생산이 기회비용으로 상실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병제로 필요한 추가 인건비는 군대에 가지 않는 다수의 청년들이 내는 경제활동 지불비용으로 간접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세 정당은 편차는 어느 정도 있지만 모병제 도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병역문제를 해결하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6개월(육군 기준)인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자는 안을 내놓았다.

#### 쟁점화 꺼리는 국방부

한나라당 분석에 따르면 24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기본적으로 국민 병역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학 재학생의 경우 전역 뒤 복학하기까지 공백을 줄이는 등 청년들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 단축 방안으로는 기술분야의 사병을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술군 중심의 전력재편을 촉진하며, 방위력 손실도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러한 제도 변경이 당장 시행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당 관계자는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정예강군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남북한 관계변화와는 큰 관련이 없다”며 “남북한 평화구축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민주당의 공약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국민당은 병과와 배치장소 등 근무여건에 따라 24~26개월로 복무기간에 차등을 주자는 흥미로운 공약을 제시했다. 지금은 백령도에 근무하거나 서울에 근무하거나 복무기간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편하고 인기있는 병과나 근무지는 좀더 기간을 길게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짧게 해주자는 것이다. 민주국민당은 이로써 입대 뒤 병과 및 부대 배치에 따른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력층의 자제가 아니라서 오지에 배속받았다는 불신감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어떤 입장일까? 국방부는 일단 민간단체와 정당을 가릴 것 없이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또는 징병제 개선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군축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 등을 경계하는 것이다. 병역제도 개선론 가운데는 현재의 방위비 수준 유지를 전제로 군전력의 효율성을 높이자(즉 군축 자체를 주장하지는 않는) 견해에서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방위비 삭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래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 “병력 절반 뚝 잘라도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심지어 복무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한 여당의 당정협의 요청에도 적지 않아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 등은 전혀 검토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국방부 논리는 병역자원 수급전망 도식(표 3)으로 요약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001년에는 징집 가용자원이 각각 37만명, 38만명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원(현역, 전경, 경비교도 포함) 31만2천명을 초과한다. 이에 따라 남은 인적 자원을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근무자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가용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 30만4천명, 2006년 29만1천명, 2007년 28만5천명 등으로 소요인원을 밀들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로서는 대체근무자를 줄이거나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현역병 확보대책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논리는 의문을 낳는다. 국방부도 10~15년 이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예상하고 “기술집약형 군 구조에 적합한 인력규모 및 구성으로 조정” 하는 것을 전력 재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의 점진적 감축(현재 수준의 81%) 및 해·공군 증원 △간부(장교·하사관) 위주의 인력구조로 조정(현재의 24%를 30% 이상으로)한다는 정책과제(국방부 정책문서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를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러한 중·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에 따라 내년부터라도 그에 맞는 인력 수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늘 31만여명이 고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곤란하다. 그게 아니라면 중·장기 목표는 군 개혁 요구를 피해가려는 걸치레 빈말로 그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방부 스스로 뉘가를 바꿔나갈 태세가 엿보이지 않는 것이다.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이렇게 진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군의 효율화이다. 지금의 한국군은 60여만명 가운데 35만명가량이 후방지원 행정·기술병 등이다. 실제 전투력과 무관한 인력이 대규모로 붙어 있는 꼴이다.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면 30만명만으로도 효율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3년 계획만 세우면 지금부터라도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군대를 좋아해 가고 싶어하는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많다. 문제는 장군들이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사병을 줄이는 데 저항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방장관을 민간인이 한다. 미국방성의 스텝도 95%가 민간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에 얽매이지 않는 민간 전문가들로 국방부를 새로 짤 때 군 개혁이 가능하다.”

또다른 군사평론가 정창인씨의 진단도 결론은 같다. “청년 인구층이 60여만명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데 부족해지는 시점이 곧 온다. 그래서 더더욱 모병제로 전환해 군을 전문직업군화해야 한다. 현재 조건에서도 모병제+징병제는 당장 가능하다. 각종 특례제도를 없애고 기본체력만 갖춘 사람은 모두 입영시킬 경우 복무기간을 지금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숙련도가 요구되는 병과가 생길 텐데, 이들을 중심으로 모병제를 하면 된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군의 정예화·전문화를 위해서라도 모병제의 장점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음은 분명하다. 복잡한 무기체계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므로 이들에게는 당연히 민간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올려야 한다. 징병제는 법규를 내세워 인력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값이 낮다보니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단순인력 수요만 과잉팽창해 국가적 인력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 군의 정예화·전문화를 위하여!

그러나 모병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우리 사회 여건에서 어떤 대우로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가 불투명하다.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할 여지도 없지 않다. 실제로 네티즌들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아무리 대우를 좋게 해주어도 군에 가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이 징집제를 유지하는 데는, 지원제로 전환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떨어지는 동독 출신 위주로 군대가 짜일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요인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주제를 둘러싼 공개적인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의제 설정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심지어 집권여당과의 당정협의조차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사태는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징병제의 개선 여부를 포함해 병역제도의 골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군 가산점 논란에 이어 총선에서 관련 공약들이 쏟아진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토론이 전개될 기대해볼 만한 시점이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mail.com



-----  
국방의 의무를 '나의 자유' 로!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을 위한 운동에 나선 사람들

“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끌려갈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말, 한국사회 또 하나의 금기가 깨졌다.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이하 ‘징반모’)(zingbanmo.gazio.com)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모임은 스스로의 성격을 ‘징병제의 위헌 판결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현실화하려는 N세대의 모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병제가 가능한 시점을 제시하라’

‘국방의 의무’. 지난 50여년간 이 말 앞에는 항상 ‘신성한’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다녔다. 감히 누구도 ‘국가안보’ 라는 당위 앞에서 ‘개인의 권리’ 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 당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용공으로 매도되거나 이기주의자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징반모’ 의 주장은 가히 파격적이다.

“반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군복무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특히 선택의 자유)을 침해하는 만큼 각 개인이 자신의 여건에 따라 군복무를 하든, 대체근무(사회 봉사활동)를 하든, 경제적 부담(국방세)을 하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군인력 확충이란 명분 아래 자행돼왔던 초법적인 인신구속을 타파하여 국가와 개인의 관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마치 반국가조직의 선언문 같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침해당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를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시 할 뿐이다. ‘용공’ 의 혐의를 씌울 어떤 이데올로기적 배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국가라고 하더라도 ‘결코 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는 것이 ‘징반모’ 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징병제의 폐지와 대안적인 모병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징반모’ 가 지적하는 징병제의 폐해는 이렇다. 우선, 형평성의 문제다. 성별이나 건강이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건강한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징집당하는 현실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이나 장애인도 징집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이들은 사회 봉사활동이나 국방세 등 다양한 국방의무 분담 방법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형태이든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과 군축협상을 통해 최대한으로 병력을 줄인 뒤, 필요한 병력과 임금, 그로 인한 세부담 등을 산출하여 모병제가 가능한 시점을 제시하라” 는 촉구도 빼놓지 않는다. 처음에는 잠잠하던 ‘징반모’ 사이트는 올해 초 군가산점 논쟁이 터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 수는 불과 45명. 그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징병제’ 를 반대하는 행동은 힘들다는 방증이다. ‘100만명 서명운동’ 까지 밀어붙이겠다던 이들의 호기는 일단 한풀 꺾인 상태다. ‘징반모’ 사이트 운영자 배관호(23)씨는 “지금 당장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며 “그렇지만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징반모’ 만이 유일하게 징집제를 문제삼은 건 아니었다. 군가산점 논쟁이 ‘남



녀간의 사이버 전쟁' 로 치닫던 지난 1월부터 나우누리, '참세상' 등 통신 게시판에는 군가산점 문제의 근본이 징병제에 있음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5~6개 대학, 4월에 '집중행동주간'

“의무복무제에서 직업군인제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한 정책대안이다.” (참세상ID shkim) “군가산점 논쟁은 중·장기적으로 평화운동에 그 지향을 두어야 한다. 군축과 더불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나우누리ID strike93) “모병제 등 군문제에 대한 대안은 대부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나우누리ID peloyd)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사이버공간뿐 아니라 '현실운동' 에서도 징병제 반대가 서서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가산점 폐지 운동을 벌여오던 단체들이 징병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각 학교 총학생회와 여성운동모임, 장애인 인권단체 등 40개 대학이 참여한 '실질적 군문제 해결과 군가산점 존치안 철폐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바로 그런 움직임이다. 이 단체는 이름에도 명시했듯이, '평등권' 에 위배되는 군가산점 제도 폐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군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아직 참여단체간에 다소 입장차이는 있지만, 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징병제 반대' 로 나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비대위' 는 4월3일부터 9일까지 '집중행동 주간' 을 선포하고, 5~6개 대학에서 직접행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아직 '징병제' 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는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군대내 개혁' 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대 내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형상화한 퍼포먼스인 '우리는 군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 주요행사다. 또한 '징병제' 를 중심으로 한 군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공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비대위' 에서 활동하는 정길현(25)씨는 “아직도 레드콤플렉스가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징집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 군가산점 폐지 운동에도 역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는 해볼 생각” 이라고 밝혔다.

진정한 안보란 무엇인가

반전과 군비축소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평화인권연대' 의 흐름도 주목해볼 만하다.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정민(30)씨는 “이제는 군사력만이 안보라는 생각을 버릴 때” 라며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라고 이야기한다. '군사안보' 가 아니라 '인간안보' 라는 좀더 넓은 차원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서로 출발점은 다르지만 곳곳에서 '징병제' 에 대한 문제제기는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의식의 차원일 뿐 '징집거부 선언' 과 같은 집단 행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미 군열이 생기기 시작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 라는 50년 묵은 신화. 붓물이 터지는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

월급 많이 줘도 절대 안 간다?



## 징병제에 대한 첫 여론조사... 20%만이 모병제 전환 반대

‘징반모’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웹을 통한 여론조사에는 항상 신뢰성의 문제가 따른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조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다.

우선, 징병제에 대한 찬반투표의 결과다(362명 투표참가). ‘당연히 모병제가 돼야 한다’가 20%,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모병제로의 전환’이 61%였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반대한다’는 20%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에 참가한 압도적 다수가 ‘모병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징병제의 가장 큰 위험성은?’이라는 질문(221명 투표참가)에는 40%가 ‘기회(젊음)의 상실’이라고 대답했다. ‘평등권’ 박탈이 22%, ‘자유권’ 침해가 19%, ‘인권’ 유린이 16%, ‘자존(생존)권’ 위협이 3%였다.

세 번째는 ‘대체근무를 전제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6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30%, ‘모른다’는 응답은 9%였다.

이에 반해, ‘구타나 일차려가 없어진다고 전제하고, (모병제가 되면) 얼마의 임금을 주면 군대에 가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 안 간다’가 46%로 가장 높았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세계는 ‘프로페셔널 군인’ 시대

징병제 폐지와 함께 군 병력 꾸준히 감축한 유럽... 병력은 줄어도 전력은 강화

지원병으로 편성된 21만5천명 규모의 영국군과 징병제를 토대로 한 60여만명 규모의 한국군은 어느 쪽이 더 강한 군대일까?

영국군과 한국군은 각기 처한 안보상황이 다르다. 영국군은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으로부터의 침공위협이 현저히 약화된 데 비해, 한국군이 짊어진 부담은 그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군대의 전투력을 비교할 때 한국군의 손을 들어줄 사람은 적을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전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나 복무기간의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냉전 퇴조’ 시대상황 반영

영국군은 57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 전환할 당시 72만명에 이르던 병력규모를 군구조개혁을 통해 꾸준히 감축했다. 2000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전선 우선 정책’(Front Line First)은 전투부대 우선의 군사력 재편을 통한 국방비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 사령부와 후방 지원부대의 통·폐합을 통해 비능률 요소를 제거하고, 병력규모를 축소하되 절감



된 예산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96년 5월 각료회의에서 '1997~2002년 군 개혁법'을 채택함으로써 군 개혁작업을 본격화했다. 이 법은 당시까지 존속하던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함으로써 50만2천명 규모의 병력을 35만2천명 규모로 감축하도록 했다. 지원병의 복무기간은 10개월로 정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전력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남유럽과 지중해 수송로 방어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북아프리카, 중동 등 분쟁지역에 종종 병력을 파견하는 등 대외지향적 군사전략 때문에 유럽에서는 비교적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이탈리아도 98년 당시 41만명에 이르던 병력규모를 2000년대에 25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군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12개월 복무기간의 징병제(공군은 18개월)를 운영해왔는데, 최근 들어 복무기간을 4~6개월로 단축하면서 직업사병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탈냉전 이전까지 동유럽의 침공에 대비해 15개월을 의무복무하는 징병제를 전제로 평시 48만9천명의 병력규모를 30년간 유지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 징집대상 연령의 인구감소로 문제가 발생해 90년대 초에는 한때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뒤 동유럽 붕괴로 인접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현재는 의무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인 상태다.

이런 예들을 볼 때 유럽은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점차 전문직업군화하는 게 일반적 흐름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 냉전적 대결상황이 점차 퇴조했다는 시대적 상황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전력 자체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혁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도의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전문지식과 윤리의식 등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프로페셔널 전사 집단'으로 군대를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 베트남, 남북한 등은 노동집약적 대병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평론가 정창인씨는 "한국군 병사들의 상당수는 국방의무 때문에 끌려나와 몸으로 때우고 있는 꼴"이라며 "99년 동티모르 파병 당시 전투력과 규율을 제대로 갖춘 부대를 선발하다보니 결국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특전사를 차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그런 배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mail.com

=====

2001.4.12 unews.co.kr

징병제 무엇이 문제인가?

[U 칼럼] 김창수 민화협 정책실장

김창수 기자 cskim615@hanmail.net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많은 나라들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의무병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의무병제의 모순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지원제로 전환하였고, 독일에서도 징병제를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징병제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병제에서도 인력비용이 상승한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징집병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징집병에게도 민간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인력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병역의무의 불평등성이 나타난다. 징병제의 핵심은 형평성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때문에 불공평성이 두드러진다.

셋째,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므로 장기근속자가 부족하여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현대무기체제는 높은 숙련도때문에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병사들이 의무기간이 끝나버리면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서 징병제는 근거를 잃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보상황, 국민의 방위의식강화, 예산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징집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민의 방위의식은 징집제에 의해 고취되지만은 않는다. 국민의 애국심과 충성심에 기초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를 지닌 모병제이다. 예산 역시 앞서 살핀 것 처럼 징집제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징집제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

병역대상자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전투력을 보유할 수 있는 병역제도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다. 특히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수급과 형평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도 병역대상자의 수급과 형평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정규병력의 규모와 복무기간이 한정된 상태에서 징집제도를 실시하니까 병역수급과 형평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병역인구의 과잉으로 인한 병역의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위병제도를 신설하여 군전투력의 보강과 함께 잉여자원의 흡수를 꾀하여 왔다. 병역특례제도로 되어버린 병역의무특례제도 역시 원래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의 징집제도가 계속된다면 거대병력을 거느리는 상태에서 탈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복무기간의 단축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복무기간은 징집제도나 병력유지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제도나 병력의 규모와 관련하지 않는 복무기간의 단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징병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는 대체병역제도를 활성화하고, 많은 선진국가들이 수용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에서도 결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징병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단지 병력수급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은 아니다.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권리의식이 확산되면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가치의 확산이 군대의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 사회생활에 비교해서



군생활에 대한 매력의 감퇴는 징병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사이에도 이런 현상은 이미 1880년대말부터 생겼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989년에 실시한 [장병의 의식구조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현역복무를 안하는 청년들을 행운아로 보며, 직무에 대한 만족감도 낮고, 전우와의 일체감, 상경하에 분위기, 지휘관에 대한 존경심, 군인으로서 자부심도 낮다.

둘째,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강한규제나 인격을 매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셋째, 군법이나 군기유지활동이 너무 엄중하여 형식에 치우쳐 있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군의 현실이라고 본다.

넷째, 군생활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도 많으나(59.3%), 군복무의 최대목표는 시간을 때워서 성한 몸으로 제대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많다(30.2%).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사병들과 장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징병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이나 사병들이 군에 대한 가치를 사회생활에 대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변화된 국제정세, 징집제도의 강제성, 군대의 낙후된 민주주의 때문이다. 국제정세나 남북관계의 변화로 국민들은 징집제도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라고 여기기 보다는 강제성 있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 내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위기는 사병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냉전제도의 해소와 평화정착의 관점에서 병역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 현재의 징병제도는 제도적으로도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징병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사병군무를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비도덕성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징병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해야할 시기가 되었다.

2001-04-09 12:02:00

© 2001 유뉴스

=====



=====

한겨레 21 제352호

[사람과사회] '안티 징병제' 를 진압하라

경찰청 '군대반대·병역기피 사이트' 전면수사... 두곳 자진폐쇄 등 '토론 위축' 움직임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의 차이는 무엇인가? 징병제 토론과 병역거부 선동은 어느 선에서 갈리는가? 지난 3월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기피 방법을 알려주고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3개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병역기피 조장' 혐의로 지목한 3개 사이트는 지난 3월 아나키스트들이 개설한 '군대반대 사이트'(non-serviam.org), 다음 카페의 '징병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징거모), 라이코스의 게시판 '존나깨는 병무청'이다.

징병거부를 공공연히 선동?

징병제 관련 사이트 중 지난해 초, 가장 먼저 개설된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징반모·www.anticonscript.org)은 수사에서 제외되었다. 징반모는 이미 4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징병제 관련 사이트 중 가장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징반모는 징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병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토론 사이트"라며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뇌물 액수와 정신포 치료, 습관성 탈골 등 구체적인 병역기피 방법을 알려줘 문제가 된 사이트는 '존나깨는 병무청'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병역특례 취업정보를 알려주는 등 사설 병무상담의 성격이 강하고, 일부 게시된 병역기피 방법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어서 경찰도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상태다. 다음 카페의 징병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병역거부 선언' 메뉴를 만들어놓아 수사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사이트가 폐쇄될 때까지 병역거부 선언에는 단 한건의 선언글도 올라오지 않았을 뿐더러 회원도 너댓명에 불과하다. 경찰도 "이 두개의 사이트는 위법 혐의가 미미한 정도"라며 "구체적으로 병역기피를 도와준 적이 있는지만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군대반대 사이트'에 맞추고 있다. 언론에 의해 '병역기피 사이트'로 뭉뚱그려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 사이트를 특히 문제삼는 것은 군대반대 '운동'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이트의 한 회원은 공개적으로 '군대가지 않겠다'고 밝히며 병역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징병거부를 공공연히 선동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등 군대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형법 114조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가입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들을 추적 조사한다는 게 경찰쪽 입장이다. 20일 경찰의 수사방침이 발표된 뒤 이 사이트에는 하루 300여건의 글이 폭주했다. 이들에 대한 지지글부터 극단적인 반대글까지 징병제를 둘러싼 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수사 발표 당일이었던 20일, 경찰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라이코스 코리아에 사이트 운영자의 인적 사항과 IP주소를 요청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도 폐쇄 요청을 한 상태다. 다음쪽



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운영자의 인적 사항과 IP주소를 넘겨줬다. 하지만 라이코스 코리아쪽은 “징병제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인터넷이 가져온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강제 폐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아직 심의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폐쇄 결정을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건 수사 발표 이틀 뒤인 22일, 다음 카페 ‘정거모’의 첫 화면에는 ‘본 카페는 2001년 3월22일부로 개설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카페가 폐쇄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같은 날 라이코스의 게시판 ‘존나깨는 병무청’의 모든 게시물이 삭제됐다.

법 적용 범위 둘러싼 논쟁 이어질 듯

두 사이트의 운영자는 이번주 수사에 응하기로 했지만, 3월26일 현재 ‘군대거부 사이트’ 운영자 두명은 아직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가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114조2항을 어긴 혐의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형법 114조2항 자체의 규정 범위가 모호해 오용될 소지가 큰 조항”이라고 전제한 뒤 “과연 이 사이트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을 지녔는지,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경찰은 운영자뿐 아니라 가입회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군대거부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는 병역기피 방법을 사이트에 올린 적이 없다”며 “정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밝힌다. 경찰이 주목한 오프라인 모임은 ‘군대반대 사이트’뿐 아니라 다른 징병제반대 사이트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가 속속 발표되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등 8개 평화·인권단체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찰의 수사방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징집제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란 점에 주목한다”며 “징병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합리적 토론 및 사회공론화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다음날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이 참여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의 성명이 이어졌다. 이 단체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징병제에 대해 단지 ‘논의’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인 범죄 운운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검열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징병제 논의 사이트에 대한 전면수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 소동에 이어 인터넷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세 번째 시나리오”라며 “지금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한다.

병역거부단체조직 가입죄 적용?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군대거부 사이트가 개설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큰 조직이 형성됐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운동이 본격화했을 때 치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징병제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최초의 병역거부단체조직 가입죄 적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경찰은 군대반대 사이트가 ‘병역거부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군대거부 사이트 운영자쪽은 징병기피가 목적이 아님을 반박해야 할 상황이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앞

으로 징병제의 토론 수위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징병제에 대한 토론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불거져나온 경찰의 수사방침은 벌써부터 토론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자진 폐쇄' 한 두 사이트가 이를 증명한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2001. 3. 20

한겨레/사회

## [인터넷] '병역기피' 사이트.. 징집제 거부 선동

인터넷상에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에 이어 이번에는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등장,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사이트들은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병역거부 운동에 동참하는 회원을 모집, 실제 모임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경찰에 적발된 '병역기피' 사이트는 모두 3개. '아나키즘(무정부주의)'과 연계된 사이트와 병역기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이트가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개설됐으며, 병역과 징집제를 거부하는 여론조성 사이트는 최근 개설돼 회원을 모집중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설된 한 사이트는 공개사이트로 병역 및 징집제를 거부하고 선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서울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만난 일부 네티즌들이 병역거부 운동을 위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0000 병무청'이란 이름의 사이트에는 병역기피방법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이트에는 병역기피를 위한 구체적 뇌물액수가 제시돼 있는가 하면, 외국국적 취득, 정신과 치료, 습관성 탈골 등 구체적인 병역기피 방법을 가르쳐주며, 공익요원이 되는 방법 등도 나열돼있다"고 말했다.

이달초 개설된 또다른 사이트는 현재 회원이 11명으로, 징집제 거부를 위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직까지는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선동하고 나선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병역기피' 사이트 3개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일부 네티즌들이 `병역기피' 사이트를 통해 모임을 가졌다는 점을 중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할 경우 형법상 `병역거부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상자들을 병무청에 통보하는 한편 `병역기피'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에 통보, 폐쇄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2001. 3. 20

한겨레/사회

### [인터넷] 경찰,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수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기피 방법을 알려주고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조장 사이트 3개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지난 6일 서울에서 병역기피조장 사이트를 통해 만난 네티즌들이 병역거부운동을 위한 모임을 갖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을 추적,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할 경우 형법상 `병역거부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들을 병무청에 통보하는 한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에 통보, 폐쇄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2001. 3. 20



· 인권하극노숙 기사.

· 2001. 3. 24

## 자살->폭탄->병역 사이트 등 인터넷에 대한 전방위 공격

경찰, 마녀사냥으로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이광길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 공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징집) 대상자는 병무청에 통보하고, 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평화인권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전면 수사방침은 징병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는 매우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징병제에 개인의 생각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되어야"하며, "이를 경찰이 '반사회적 범죄'로 몰아 수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운영자들은 '병역 문제를 감히 입에 올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경찰 발표이후 집에 못 들어가는 '안티밀리터리사이트' (<http://non-serviam.org>) 운영자 조약골 씨는 "병역거부를 선동한 적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다만 "나는 전쟁 없는 세상을 바란다. 그러나, 폭력 지향적인 군대가 있는 한 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군대를 반대할 뿐이다"고. 또한 "지금 경찰에 출두해봐야 내 생각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암담하다. 사방이 벽으로 느껴져 극단적 해결책만 떠오른다"며, "징병제에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저들의 먹이감이 되었다"고 쓰게 웃었다.

조씨뿐 아니라 다른 두 사이트 운영자들도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만 든다"고 하소연한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자살->폭탄->병역 시리즈가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동안 온라인 공간은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확실하게 '찍혔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해한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목소리가 독주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당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온라인을 장악할 명분을 조성하려는 계산된 행위"라며, "이번 일 역시 인터넷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보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녀 사냥의 연장'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조씨 등은 "징집제 거부 선동하는 병역기피 사이트"라는 제하의 기사를 써 '소동'을 증폭시킨 연합뉴스 김 아무개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인권하루소식> 3월 24일자 기사입니다.

2001/03/24 오전 3:14:00

기사제공 기관 : 인권운동사랑방 © 2001 OhmyNews



평화인권연대 2001/03/24 (토)

■ 성명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마녀사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이가 자살을 하면 자살사이트 탓이고, 사제 폭발물 사고가 터지면 이는 폭탄사이트 때문이며, 이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면 '반사회적인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인 3월 20일,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찰은 회원들간에 '병역거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해 형법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3개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그러나 경찰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이트들은 병역거부를 '선동'한 것이 아니라, 징병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표출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곳이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결국 이번 사건 역시 '인터넷은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라는 보수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론몰이인 것이며 따라서 경찰의 이번 징병제 논의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과잉 수사인 것이다.

또한 경찰의 주장대로 이 사이트들에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사회적인 사이트라 매도할 수는 없다. 이미 독일, 대만 등 30여개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서 출발하는 권리인 것이다.

우리는 징병제와 관련한 각 개인들의 다양한 생각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과 경찰에서 징병제에 대해 단지 '논의'를 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인 범죄 운운하는 것은 사건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인터넷에 대한 검열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기에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경찰이 사이트를, 동호회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병역거부단체조직  
가입죄' 운운하며 징병제 논의 사이트에 대해 전면수사 방침을 밝힌 것은  
징병제의  
문제점과 관련한 합리적인 토론 및 사회공론화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적인 의지의 표현일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위협천만한 발상으로서 우리는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서 연일 매도하는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적 사이트'가  
현행법상 명백한 범법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범죄인 것처럼 확정하여 보도  
하는 것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의 규제논리를 정당화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보수논리와 선정적인 상업주의에 영합하는 언론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인터넷을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 환치해버리는 이러한 보도  
태도는 결코 사회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뿐더러,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여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에 우리는 징병제 논의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 및 언론의 자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경찰은 징병제 논의 사이트에 대한 전면수사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경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쇄된 징병제 논의 사이트를  
즉각 원상복구 조치하라!

하나, 징병제 등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확실하지 않은 사안을 범죄로 확정 보도하여 인터넷에 대한 악의적 왜곡  
과장보도를 일삼는 언론은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보도하라!

2001. 3. 23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연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평등인권연대.

## 성명서

2001년 3월 23일

성명서) 징병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및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3월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조장 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특히 지난 6일 서울에서 사이트를 통해 만난 네티즌들이 병역거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이트의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해 형법의 '병역거부단체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측에 통보, 폐쇄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우선 경찰의 수사방침이 최근 언론을 통해 징집제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군복무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현행 병역제도의 합리적 개혁을 위한 사회 각계의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징집제도 하에서 남성이라면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군대내 폭력과 의문사문제, 군복무여부를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우의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군복무가산점제도의 문제,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해 병역특례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부당노동과 해고의 문제등, 현행 병역제도가 파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살상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징병대신 감옥을 선택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소수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바 있고, 이에 따라 징병제의 지원병제로의 전환 혹은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도입 같은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특성으로 하는 몇몇 병역거부관련 사이트들에 대해 경찰이 전면수사방침을 밝혔다는 것은, 결국 징병제의 문제점과 관련한 합리적인 토론 및 사회공론화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시킨 것이며, 이는 인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반인권적인 조치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경우와 같이 병역거부와 관련한 개인의 생각이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출되는 현상은 인권보호 및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에 대해 경찰과 언론이 자의적으로 과잉 해석하여 '반사회적 범죄'로 몰아가는 지금의 분위기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양심적 병역거부권)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30여 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전투 분야의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동독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1949년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였으며, 징집제를 부활시킨 1959년 이후에도 "국가간의 어떠한 무력분쟁이라도 이에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대체역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이미 작년부터 사회역이라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사회복지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권리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 또한 여러 차례 인간의 기본권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마련을 결의한 바 있으며, 회원국들이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중이다. 글머리에서 밝혔듯이 한국에도 이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1500여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종교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이와 같은 양심상의 결단, 혹은 인도주의적 결단을 지킨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보통시민으로조차 대우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병역거부와 관련한 논의를 단순하게 '의무를 방기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 이들 소수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지어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극복해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징병제 관련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반사회적 범죄' 규정 및 과잉 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경찰은 징병제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현재의 강제 수사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경찰은 징병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주장과 논의에 있어 '자유로운 토론 및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형법 114조 2항을 개정하라!

하나, 징병제 자체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회논의를 시작하라!

2001. 3. 22.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안관찰범 철폐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 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인권연대



# 한겨레21



THE HANKYOREH21

지남오

한겨레21 토론방

구독신청

Hot

2001. 2. 27 [제 348호]

- ▶ [한겨레21](#)
- ▶ [이슈](#)
- ▶ [특집](#)
- ▶ [주요기사](#)
- ▶ [한겨레21 express](#)
- ▶ [광고](#)

검색

 go

- 커버스토리
- 특집
- 초점
- 경제
- 정치
- 전단
- 교육
- 다담
- 통일로
- 이슈추적
- 상역패기
- 보도그둑
- 시시비비
- 플뿌리통신
- 사람과사회
- 마이리리리
- 움직이는 세계
- 아시아네트웍
- 과학
- 환경
- 문화
- 스포츠

프린트하기  
기사들려보기

## [사람과사회] '국방 의무'라는 이름의 굴레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점점 뜨거워지는 징병제 논란...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문제제기도



사진/제주 인권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는 재미 여성학자 권인숙(가운데)씨. 그는 징병제 여성차별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힘내세요! 저는 우리 XX이 군대 보내! 바로 일주일 뒤에 출국했어요. 일주일동안 안 시체였지요. 그리고 7개월째 못 만났구요. 그래두 여러분. 제 남친(남자친구)이 그러는데 편지가 제일 좋네요. 가장 힘이 난다나요? 힘든 훈련 받고 오는데 편지가 와 있으면 힘이 너무나도 쉽네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거면요. 편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구요. (이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세요. 파이팅이에요!)”

### 대체봉사제 사회적 이슈로 [토론방] 신앙의 자유 vs 병역의 의무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는 방'(www.waitforyou.net)에 최근 한 여성이 올린 글이다. 사이트에 들 연인원이 41만여명에 이를 만큼 이 사이트는 인기가 좋다. 그러나 징병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제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사이트에서만큼은, 징병제는 '한번도 도전받지 않아온 제도'로 보인다.

애인을 군에 보낸 여성들의 뜻이 어쩔드간에, 징병제도는 올해도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뤄지는 몇 가지 논의들이 그 단초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징병제에 대한 논란은 먼저 <한겨레21>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인 '여호와의 증인' 관련 기사를 내보낸 뒤 확산되고 있다. 즉, 이들에게 대체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과 형평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일부의 반대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인터넷한겨레>의 '한겨레21' 토론방 등 사이버 공간이 논쟁의 장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쪽에서 내세우는 종교적인 입장과는 무관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견고한 '군사주의적 안보제일주의'가 일부나마 허물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특히 대체봉사제 주장은 국내의 평화운동 그룹의 광범위한 지지와 일부 기독교 단체의 호응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평화운동세력들은 3월 중순께 국내외 평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양심적 징집거부에



대한 워크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군가산점 논쟁이 시작된 뒤 △유력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군복의 형평성 문제 △현역과 단기사병(방위) 복무자 또는 미필자 사이의 사회적 차별 △남녀 평등 논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문제 등으로만 이뤄지던 징병제 관련 논쟁이 좀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둘러싸고 논쟁의 지평을 넓혀가고는 셈이다.

징병제도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제기는 징병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통해 모병 도입을 현실화하려는 세력들의 다양한 움직임이다. 이들은 지난 50년 동안 '신성한 국방의 의무론'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던 국가제일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며, 침해당할 수 없는 개인 자유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중 하나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징병제와 군사주의 평가로부터 나오고 있다. 재미 여성학자 권인숙(38)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동안 제주도에서 한국인권재단(이사장 신용석) 주최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인권학술회의(서 '군사주의와 여성:징병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징병제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 내용이다.

**“징병제는 남성성을 공고화한다”**

사진/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이정용 기자)



권씨는 “한국에서 징병제도는 생각해볼 필요성조차 없었던 사회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여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에 끼치는 이 징집제의 영향이 결코 적을 수 없다”고 전제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시각을 드러냈다.

권씨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징병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사건 대법원의 군필 남성의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사건을 꼽았다.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군사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정도와 그것의 성별화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권씨에 따르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기피를 둘러싼 반응은 한국사회의 3가지 기본전제를 보여준다고 한다. 첫째 모든 건강한 젊은 남성은 국가방어의 의무를 다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모든 남성은 국가방어의 의무를 지는 데 있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모든 아버지는 아들들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격려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권씨는 이런 전제들이 별 이견없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은 제 징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징집제가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하곤 하는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한국적 현실의 근거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또 이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공포 이외에도 자주국방과 경제개발만이 민족생존의 길이라는 박정희식의 논리전개가 아직까지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지향성이나 계층을 떠나서 강하게 존재해온 민족주의도 이런 국가안보중심적 논리의 한축이



되어왔다고 권씨는 분석했다.

권씨는 이어 “국가방어의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는 이전의 종교적인 힘이나 왕권의 힘 대신 근대적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발적 충성심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며 “민족을 위한 제일의 희생으로 취급되는 (남성들의) 전사적 희생은 군대 안팎에서 그 사회의 군사화된 남성성을 부양한다”고 지적했다. 즉, ‘남성을 위한 제2차 학교’로서의 징병제도는 △10대의 방황과 사회:서에 대한 저항을 끝내고 조직화된 시민사회속에서 협조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있는 남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확인서임과 동시에 결국 △군가산점과 더불어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의 위치를 더욱 공고화하는 특권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권씨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같은 군부대 출신 선후배들이 함께 참석해 추억을 회상하며 우의를 다지는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존인지도 모른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부정적인 평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후후하며 자랑스러운’ 분위기다.

**매매춘 문화와도 결부**



사진/징병제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단 한번도 전발지 않아온 제도로 꼽힌다. 입영열차를 타고 있는 젊은이들. 획일화된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대체복사제 주장이 힘을 얻었다.(강창광 기자)

권씨는 이같은 성 차별화된 징병제 속에서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구실과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구실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회창 후보 아들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군대에 가서 국가방어의 의무를 다할 것을 격려함으로써 자신의 부성적 본능을 극복하는 이성적 인간으로 표현되기를 기대받지만, 어머니는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가장 극적인 예는 인기리에 방영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우정의 무대>에서 ‘그리운 어머니’ 코너로 꼽힌다. “신기하리만치 징병제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아버지는 사라진다.”

이 부분에서 권씨는 묻는다. 만약 대통령 후보가 여성이었고 그 여성 후보의 아들이 징집이 면제되었다면 여론을 어찌했을까라고. 권씨의 대답은 냉정하다. “아마도 그 후보에 대한 비판은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판의 정도보다는 덜하였을 것이다. 그 여성 후보의 행동은 절박한 어머니의 자식사랑으로 이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는 바로 그런 이유로 이성적이고 책임있는 멤버가 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의심을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권씨는 이와 함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제기를 던진다. 첫째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가 나타내는 한 특성인 강한 남성적 동류의식의 한 근거를 군대경험이 득하는 연대감이 제공한다는 것, 둘째는 군사화된 남성성과 성폭력이나 지나치게 비대화한 매매춘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권씨는 “법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적·무의식적으로 만연해 있는 성적 불평등이나 다분히 폭력적인 남녀간의 관계, 100만이 넘는다는 매춘여성의 존재도 이 징병제도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는다”면서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씨의 발표를 계기로 징병제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존하는 여성 문제를 좀더 역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작업이라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어쨌든 1949년 병역법 제정으로 육군 2년, 해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면서 도입된 뒤로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은 채 골간이 유지돼온 징병제도 올해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mailto:kimcs@hani.co.kr)



[Home](#) | [커버스토리](#) | [특집](#) | [진단](#) | [경제&경제인](#) | [초점](#) | [삶](#) | [과학](#) | [지구촌](#) | [문화](#) | [스포츠](#)

copyright(c)2000 The Internet Hankyoreh mail to [편집장](#), [webmaster](#)

[인터넷한겨레](#) | [한겨레21](#) | [씨네21](#) | [DOT21](#) | [DBDIC](#)

[hani.com](#) | [hani.net](#)